

여성 동향

94. 9.11 - 94. 10.10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세계인구회의) 폐막

남성 육아휴직 도입 - 노동부

윤락방지법개정 추진 - 보사부

“여성 사관학교 입학허용 협의중” - 행정경제위

[여성개발원] 조직개편.정보시스템구축 시급 - 국감자료

검정 자율성 낮아 인권개선 미흡 -변협 보고서

법조계 새 헌안으로 부상한 동성동본 불혼조항

여성 차별정년 여전하다!

◇ 인구회의 '행동계획' 채택 폐막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세계인구회의)가 13일 2015년까지 20년 동안의 세계인구 억제와 경제개발을 위한 지침을 담은 '행동계획'을 채택한 뒤 8일간의 회의를 폐막했다.

세계 1백82개국의 1만6천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부터 카이로에서 열린 이번 세계인구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계획은 단순히 가족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성의 지위향상, 경제개발, 환경보호를 통해 현재 56억7천만명인 세계인구를 오는 2015년까지 79억2천만명으로 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동계획은 이를 위해 오는 2000년까지 모두 1백70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마련해 이중 3분의 2를 당사자인 개발도상국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선진국들의 기부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 뉴욕 준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동계획 초안에 관한 분과별 토의를 12일까지 벌여 쟁점사안이던 '출산권리 및 건강' '이민가족의 권리' '청소년 성문제' 세 부분을 타결함으로써 최종 문안에 합의했다.

초안심의위원회는 총16장 1백13쪽 분량의 행동계획안에서 낙태 문제에 완강히 반대해온 로마 교황청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낙태가 가족계획의 한형태로 권장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 이 행동계획은 각국의 다양한 종교와 윤리적 가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적용자녀 수와 터울 등을 자유롭게 책임있게 결정하는 모든 부부와 개인의 기본권리를 의미하는 '출산권리 및 건강'은 카톨릭과 이슬람권에 낙태와 혼외성관계를 의미해 마지막까지 논란을 벌이다 '임신조절'이라는 용어를 모호하게 수정함으로써 타결을 보았다.

초안심의위는 청소년 성문제와 관련해서는 '성교육에서 부모의 책임과 의무'라는 글귀를 넣어 이슬람권의 반발을 무마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이 요구한 이민노동자들의 가족초청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의 입장을 받아들이며 이민노동자들의 가족상봉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이되 가족을 무조건 초청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 남성 육아휴직 도입 - 노동부

노동부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남성 노동자도 배우자인 여성노동자 대신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모성보호 차원에서 임신한 여성 노동자를 상대로 한달에 한번 태아검진 휴일제를 실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 13일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여성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남성 노동자도 부인인 여성 노동자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부부 노동자는 아기를 낳고 1년이 될 때까지 부부 가운데 1명이 선택적으로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또 임금말고도 금품지급, 주택자금 융자 등에 있어 여성차별금지조항을 강화하고 위반 때 근로기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간제 근로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간호휴가제, 기혼여성 재고용제 등 여성이 가정과 직장일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 윤락방지법개정 추진 - 보사부

시상복보사부장관은 13일 윤락행위자와 상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권보호와 선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윤락행위방지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이날 국회여성특위에 출석, 보고를 통해 윤락행위방지법이 지난 61년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처벌규정이 미약하고 선도차원에서 윤락행위자를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데 따른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어 법개정이 불가피하다며같이 밝혔다.

보사부는 이와 관련, 윤락행위자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와 함께 1년의 범위안에서 보호시설에 입소토록 하는 선도보호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윤락행위자중 20세미만의 초범자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중 본인이 회망하는 경우 지방선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도지사가 보호시설에 입소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윤락행위자와 상대자는 물론 윤락행위업주등 착취.방조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보사부는 그간의 단순보호중심의 타아에서 보호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보육사업 정착을 위해 재정투융자를 확대하고 보육시설, 설치질차를 단순화, 오는 97년까지 공공보육시설을 45여개소로, 민간및 직장 보육시설을 2만1천5백개소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 “여성 사관학교 입학허용 협의중” - 행정경제위

권영자 정무제2장관은 지난 30일 “여성도 3군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군사관학교의 여성입학 허용여부에 대한 강철선 의원(민주)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변하고 “청와대와의 이 문제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또 “남녀평등한 교육기회의 부여와 여성인력 활용차원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민자당의 대선공약인만큼 국방부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 김영삼대통령 임기중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겨레 10\2)

국방부는 지난 4월 내무생활의 불편과 훈련의 어려움 등을 들어 “여건이 성숙될때까지 여성의 3군사관학교 입학을 보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여성개발원] 조직개편.정보시스템구축 시급 - 국감자료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83년 발족됐던 한국여성개발원(원장 김정자)이 조직의 경직성과 관료주의,인력의 전문성 부족,예산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소기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조직개편과 정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월30일 국회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덕규)의 한국여성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진 것.이는 올해로 발족 10년을 맞는 개발원이 지난해 8월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직분석과 정보시스템 계획수립에 대한 연구”를 이화여대 김호근 교수(경영학과)에 의뢰,연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한국 여성개발원의 문제점은 *정부 출연기구로서 연구나 사업선정의 경직성과 관료주의 *인력의 전문성 부족 *비전부족과 낮은 보수등에 기인한 사기저하 *외부에 여성문제를 다루는 기관의 증가로 경쟁관계 형성 *업무에 대한 객관적 성과지표미흡 등으로 조사됐다.

이날 문정수(민자) 문희상(민주) 이명박(민자)의원 등은 “국제화와 같이 급변하는 외부상황에 맞게 개발원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히 문희상의원은 “93년과 94년 연구사업비가 각각 6억8천만원, 8억2천만원으로 산출된 결과는 13건, 7건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원장은 “내부에서도 개발원이 거둬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내년 완공될 예정인 여성 공동의 장 건립을 계기로 제2의 도약을 위한 조직개편과 운영 시스템 개선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자 김교수는 “고도의 정보화사회를 앞두고 한국 여성 개발원이 정보센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외 여성단체와 학계에 여성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준비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한겨레 10/1)

◇ 검경 자율성 낮아 인권개선 미흡 -변협 보고서

지난해의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변호사들은 “구조적 여건에는 상당한 개선이 있었으나 새 정부의 한계로 인권상황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총체적 평가를 내렸다.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29일 '93년도 인권보고서'를 통해 경찰과 검찰 등 정부조직내 중요 인권 관련 기구의 자율화와 합리화 수준이 아주 낮아 고문 등 구시대적 인권침해가 아직 존속하고 있으며, 정치권으로부터 자율을 얻지 못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내 인권상황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노동자의 권리와 농민의 생존권 침해 △수사과정에서 인권유린 △여성의 인권침해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별다른 개선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유린과 관련해 변협은 김기웅 순경 사건을 예로 들며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사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 때문에 언제든지 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잠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과 피의자의 접근과 통제를 허용하면 수사기록의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변협은 “특히 경찰과 검찰의 조직과 운영이 수사 위주보다는 상부에 대한 보고 위주로 돼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김영삼 정부가 사회·정치체력의 자율성 신장 측면에 일정한 한계를 둬으로써 민중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권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부분적으로는 정치체도의 개혁과 합리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갈수록 더 불합리한 구조의 개선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노동법, 국가보안법 등의 개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법조계 세 현안으로 부상한 동성동본 불혼조항

여성계를 중심으로 주장돼오던 동성동본 불혼조항(민법 제809조 1항) 폐지문제가 최근 해결돼야 할 법조계 현안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부계는 동성동본, 모계는 8촌이내는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이법의 골자.

대구,청주,전주 등 전국의 지방법원 법관회의에서 거론돼 대법원에 건의된 이 법조항의 개정논의는 대법원이 현행법 정비를 위해 전국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2일 대구지법 조용식판사를 비롯 판사전원이 동성동본 불혼조항의 폐지를 대법원에 건의함으로서 시작됐다.또 청주지법판사들 16명중 15명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이우정(민주당)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법관들의 대법원에 건의결정을 환영하며 하루 빨리 이 조항이 폐지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89년 제3차 가족법개정 당시 유림과 성균관 등의 반대로 폐지되지 못했던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지난 대통령선거때 각당이 이법의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또 지난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이태영)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연숙)가 국회에 청원을 제출, 이를 강선영, 이우정, 주양자, 강부자 등 여성의원들이 주축이 되고 그외 39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한겨레 9\30)

개정건의문을 제출한 대구지법 조용식판사는 “헤아릴 수 없는 수의 동성자가 있는 오늘날 이 법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밝힌다.조판사는 또 우생학적으로 해롭다면 모계혈족의 존수도 제한없이 금지돼야 하나 8촌이내로 규정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성동본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가 되지 않아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실상의 가족이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정신적 고통과 현실적 불이익을 받고있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 78년과 88년 2차에 걸쳐 한시법인 혼인특례법을 정해 각각 4천5백77쌍, 1만2천4백43쌍의 동성동본부부가 법적 구제를 받은 바있다.지방법원의 개정건의는 대법원에서 “불합리”한것으로 결정될 경우 법조항의 개정은 불가피하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사법운영 합리화 방안에 대한 각급 법원의 의견수렴 결과, 대구지법과 청주지법 판사 전원과 전주지법 판사 16명중 12명이 현행 민법 809조(동성동본 금

혼규정)의 개정에 찬성했다”며 “일선 법관들이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을 낸 만큼 이들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한 뒤 관련 법이나 규칙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가족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성계와 유림 등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 “이 문제를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 새로 대두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앞으로 민법 개정시 이를 반영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겨레 10\3).

◇ 여성 차별정년 이전

한국통신이 여성직종인 전화교환직의 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5세 낮은 53세로 규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 지난달 29일 한국통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제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이 내린 판결문 요지다.

이로써 93년 12월 53세로 부당해고 됐던 교환원 김영희씨(55)는 복직이 결정된 셈이다.

그러나 통신공사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김씨의 복직이 연기될 뿐 아니라 현재 53세에 이르러 울연말 퇴직위기를 맞은 다른 2명의 교환원분제가 새롭게 제기될 전망이다. 차별정년과 관련,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조와 근로자의 정년에 관해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김씨 사건외에도 최근 여성 차별정년과 관련된 분쟁사례가 다양하게 돌출되고 있다.

그 유형을 보면-

<국회 사무처>

사무원(=타자원)의 정년은 58세 반면 사무보조원 여직원은 24세.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자 최근 앞으로는 사무보조원을 뽑지않고 사무원으로 일원화, 정년을 58세로 못박았다. 따라서 1백28명의 사무보조원중 1차 선발시험을 거쳐 9월26일자로 15명을 사무원으로 발령했으며 나머지 1백13명은 사무원 전환 시험(6개월마다)을 치거나 사무원 공개선발시험을 통해 구제토록 했다. 그러나 사무보조원 정년 24세는 여전히 유효, 24세 정년 이전에 사무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삼일공사>

남자 55세, 여자 50세로 돼있던 정년규정을 90년 남자는 기능직으로, 여자는 선별포장직으로 전환하면서 정년을 각각 55세, 52세로 바꿨다. 이에 따라 92년 4월과 8월에 이숙자, 조정숙, 정유순씨등 퇴직예정자 3명이 강제퇴직 됐다. 같은해 5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숙자씨가 퇴직무효확인소송을 제기, 1.2심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93년 6월14일자로 복직됐으며 나머지 조씨와 정씨도 회사측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같은해 7월26일자로 복직됐다. 그러나 삼일공사측은 퇴직과정에서 지급된 퇴직금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면 동부지원에 소송을 제기, 승소한데 이어 94년 9월3일자로 2심의 부분패소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차별정년과 이로 인한 임금청구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또 다른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미쓰이물산>

당초 남자 55세, 여자 43세로 돼있던 규정이 여성에 대한 차별정년이라며 노동부에 진정하자 회사측은 남자 57세, 여자 45세로 연장했다. 지난해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남자는 일반직으로, 여자는 사무직으로 변경하면서 45세로 퇴직위기에 놓인 여성들이 질의서를 내는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미쓰이물산측은 여성 직종인 사무직의 정년을 3년 늘려 48세로 연장했다. 현재 정년 규정 당사자가 없어 소강상태를 맞고 있으나 언제든지 불거져 나올 수 있는 불씨를 안고있는 셈이다.

*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3일 한국능률협회가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마련한 조찬간담회에 참석, "개방하 우리경제의 새로운 지향"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보장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활동에 대한 게임의 법칙을 마련하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총리는 이어 "앞으로 정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겠으며, 환경이나 공정거래와 같이 꼭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과감히 규제를 털어내겠다"고 밝히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정보의 공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정부총리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공정성이 상치될 경우 정부의 조정역할은 필요하지만이 역시 법률과 제도에 의해 예측가능하게 수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여성들의 취업이 여러모로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3년에 걸쳐 전국에 탁아시설을 확대설치해 주부등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금리자유화를 조기에 완성하고 여신관리제도나 의무 대출비율과 같은 규제는 금융 자율화차원에서 고쳐 나가며, 세제는 더욱 단순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 9/24)

◇ 생산직과 사무직간의 임금격차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 생산직과 사무직간 임금격차가 대만,일본보다 좁혀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졸과 고졸 근로자간 임금차이도 대만보다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연구원 김태기 동향분석실장이 21일 발표한 "우리나라 임금구조의 변화와 문제점"이라는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지난 85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동일한 기간을 근무한 사무직의 55.6%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75.3%로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사무직에 대한 생산직의 이러한 임금비율은 일본의 68.5%, 대만의 71.7%보다 높은 것이다.

학력간 임금격차를 보면 지난 85년 우리나라 대졸 근로자 초임이 고졸 근로자의 2.14배에 달했으나 93년에는 1.53배로 격차가 완화됐다.

93년의 경우 대졸 근로자 초임이 고졸 근로자에 비해 일본은 1.35배,대만이 1.65배에 달해 우리나라의 대졸,고졸간 임금차이가 대만보다 좁혀진 것이다.

이밖에 남녀간 임금격차는 여성의 임금이 지난 85년에는 남성의 47.8%였으나 93년에는 56.7%가 돼 좁혀졌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갈수록 커져 85년의 경우 근로자 5백명이상 사업장의 평균 임금이 10-99명 사업장보다 11.8%가 많았으나 93년에는 36.3%나 많았다.

이는 중소기업 노조의 단체교섭력이 약한데다 사업주의 임금 지불 능력이 상대적으로 허약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한겨레 9\23)

변화하는 일터

◇ 두산그룹,신입사원 20% 여성 채용

두산그룹(회장 박용근)은 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시 전체 채용인원중 여성인력을 대폭 늘리고 기존 고졸 여사원에게도 능력에 따라 대우를 해주는 능력주의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두산그룹은 지난 수년동안 각 계열사별로 정보,교육,편집,디자인,건설,홍보분야 등 전문분야에 여성인력을 활용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종전까지 필요에 따라 전체 신입사원중 최고 9%선에 불과했던 여성인력 채용폭을 올 하반기 공채에서 20%선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모집인원 3백80명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76명이 여성인력으로 채용된다. 이들 우수 여성인력을 1차적으로 일반,기획조사분야에 배치한 뒤 내년부터는 영업 및 생산현장까지 투입하는 등 여성인력의 활용폭을 넓힐 방침이다.

두산그룹은 또 기존 고졸 여사원들에게도 대졸 사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 주는 남녀 평등의 인사제도를 마련,이미 고졸 여사원과 대졸 사원간의 학력차를 4년차로 줄인데 이어 지난 25일 전체 대상자 4백90명중 희망자 2백50명을 대상으로 승진자격 시험을 실시해 앞으로 합격자에 대해서는 남자사원과 동등하게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기로 했다.

이들 합격자는 또 대졸 사원과 마찬가지로 해외연수와 출장,업무배치,교육훈련 등 동등한 기회를 주어지며 급여가 최고 40% 인상된다.(한겨레 9\29)

◇ 현대산업개발, 여성주택상담사 상시운영

현대산업개발(대표 심현영)은 10월부터 전국의 각 모델하우스에 여성주택상담제도를 운영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를 위해 최근 초급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미혼여성 70명을 선발, 전국 35곳의 모델하우스에 배치했다

회사측은 여성들이 지니는 섬세하고 자상한 측면을 부각하고 기존안내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킨 전문상담인으로 육성, 고객에 신뢰감을 주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여성주택상담사들은 일정기간의 기본교육을 거쳐 현지에 채용된 후에도 예절, 상담자세, 주택관련 전문지식 등의 기본소양교육에 대해 교육 받으며 특히 지역실정에 적합한 판촉전략을 마련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게 주요 임무다.

특히 이들은 *주택구입 및 용자에 따른 모든 사항 *고객의 개선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 접수 * 해당지역 기존아파트 시세안내 *평형, 공간구조 안내 *기타 분양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보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고객에게 안내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와 함께 여성주택상담사를 통해 모델하우스 내방객에 대한 상담일지를 작성, 미래고객을 계속 관리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구축 및 자동응답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수집, 활용할 계획이다.

세계는 지금

◇ 스웨덴

- 지난주 치른 스웨덴 총선에서 전체 당선자 3백49명 가운데 여성이 1백42명이나 돼 의회내 성 비례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전체 의석 중 40.7%를 차지하는 여성 의원의 이러한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 조각을 맡을 것이 확실시되는 사민당의 경우 소속 의원 47%가 여성인데, 잉그바르 칼손 당수는 새 정부 각료의 약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일 본

- 노동성 '직장 여성차별중지' 지시

일 노동성은 지난 2년동안 금융기관과 방송국 6백55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금융기관 2백64개소와 방송국 51개소에서 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면 각 산업기관에게 직장에서의 여성차별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한 여성 당국자가 28일 밝혔다. 여성에 대한 차별의 사례로는 *부모의 집에서 통근할수 있는 여성만 채용하고 *결혼하면 퇴직할 것을 불문의 조건으로 내세우고있으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이 거부되는 것등이 포함되고 있다.

- 일본인 58%, 여성 결혼후 혼전 성사용 찬성

대다수 일본인들은 여성이 결혼 후에도 원래의 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찬성, 보수적인 일본사회에 점차변화가 일고 있음을 나타냈다. 지난 27일 아사히신문이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는데 이 조사에서 부부가 서로 다른 두 가문의 성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8%였고 반대는 34%에 그쳤다는 것.

- 부모 혼인하지 않았어도 아동부양수당 지급

일본 나라현 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아버지 없이 엄마가 길러온 한 '사생아'(비적출자)에 대한 아동부양수당을 아버지가 이 아이의 존재를 나중에 '인지' 했다는 이유로 현청이 지급중단한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법원 결정에 대해 아동부양수당 지급관련법의 개정 등을 요구하면서 수당 지급자격 규정 변경을 요구해온 관련단체들은 물론 법률전문가들까지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 이집트

- 변호사들, CNN에 배상 요구

무스타파 아슈브씨를 비롯한 이집트변호사들은 25일 미국 CNN텔레비전이 이집트 여성의 인권상황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했다며 CNN에 2억5천만달러(약 2천억원)의 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변호사들에 따르면 CNN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유엔인구회의가 열리고 있는 동안 10세의 소녀가 이발사등 수명의 남자들에 둘러싸여 면도칼로 성기를 도려내는 할례의식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보도해 이집트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것.

◇ 타이

- 타이의 대표적인 영자지 <더 네이션>은 13일 교육부 종무국 관계자의 말을 빌려 현재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스님은 전국적으로 1백30명 이상이며 이중 상당수가 윤락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보균자로 판명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보사부 통계에 따르면 에이즈에 감염된 스님은 이보다 많은 1백70명이라고 전하고 이제 타이에서는 공무원, 회사원, 군인, 학생은 물론 스님들까지 매음굴에서 에이즈를 옮아오는 상황이 됐다고 개탄했다.

◇ 미 국

- 연방준비이사회, 소수계 대출 할당 논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0년을 고수해온 인종, 성별 및 종교 불문정책을 포기할 전망이다. 연준리는 지난달말 발표한 지역사회재투자법(CRA)개정안에서 은행들이 여성과 소수민족출신에게 담보 대출 및 중소기업대출을 더 많이 할당하도록 하는 정책전환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의 지시에 굴복한 자금할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이 발효될 경우 앞으로 은행에 1백만 달러 이하의 대출을 신청하는 중소기업들은 기업주의 인종, 성별, 심지어 결혼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개정안은 인종을 아메리카인디언 및 알라스카 원주민, 아시아계 및 태평양제도원주민, 흑인, 히스패닉 등 9개의 범주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성별과 결혼여부에 따라 범주화하고 있다. 은행감독위원회는 이같은 정보를 토대로 은행들의 대출취타 준수여부를 감시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은행들은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은행제도의 건전성을 감독해야 할 연준리가 이같은 "사회공학"적 처방을 내린 배경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냉혹한 정치현실에 굴복한 것이다.

다음 달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수계를 의식한 민주당출신의도널드 리글 상원은행위원장과 헨리 곤잘레스 하원 은행위원장은 연준리에 대해 통화정책 수립의 독립성을 박탈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이에 몸이 단 연준리가 마침내 대출할당문제에 대한 주장을 굽힘으로써 연준리를 의회에 종속시키려는 이들 양원 은행위원장에 대한 회유에 나선 것이다.

앨런 그린스펀 연준리의장의 제안을 체계화시킨 로렌스 린지 연준리이사는이에 대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상실하느니 CRA를 희생시키기로 했다"고 털어놓는다. 부시 전대통령시절에 지명된 린지가 협상테이블에 앉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다. 린지는 소수계에 대한 대출에 터무니 없는 특전을 부여하려 한 통화검사국측의 초안에 맞서 연준리측의 항거를 주도했다.

소수계에 대한 대출에 쿼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담보대출에 인종적인 편견이 개입하고 있다"는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한 연구논문에 근거한 것이다. 포브즈지(93.1.4.)는 그러나

이 논문이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회문제에 대해 스스로 리버럴하다는 린지조차 이 논문은 소수계에 대한 차별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단언한다. 그는 "소수계에 대한 대출문제의 해결책은 대출담당자에 대한 일종의 감수성훈련"이라며, 이들이 대출신청자의 말투나 옷차림을 보고 자격을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같은 주장은 상식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소수민족출신이든 여성이든 대출신청 자격을 구비했다면 은행이 왜 박대하겠는가. 은행이야 돈만 벌면 됐지 누구 돈인들 무슨 상관인가.

소수계에 대한 대출할당의 위험성은 소수계에 대한 대학입학 정원 할당과 마찬가지로 역인종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데 있다. 대출자격을 갖췄는 데도 불구하고, 다수인종이라는 이유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소수계에 양보를 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일본정부 정신대 해결책은 잘못된 결정"-뉴욕타임스지

일본정부가 정신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10억달러 규모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 것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직접보상을 배제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미 뉴욕타임스지가 14일 사설을 통해 비판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의 사설 "강간의 값"의 요약이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중 20만명의 한국과 다른 아시아국가의 10대 소녀 및 여성을 정신대로 징발했다. 이들은 창녀가 아니었으며 연쇄강간의 희생자들이었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만행의 죄값으로 10억달러를 들여 아시아국가간의 청소년 교환계획과 필리핀에 여성훈련원 설치등의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한국의 생존 정신대 여성들은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달걀세례와 가두시위를 벌였다.

돈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보상한다는 것은 잔인한 방법이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죄값으로 내놓을 돈이 10억달러나 있다면 그중 일부는 희생자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정확한 보상액 산정도 어렵고 생존 피해자를 모두 파악하기도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들 희생자에게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이들을 일본에 초청, 적절하고 장기적인 보상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일본정부가 마련한 불완전한 정신대 보상책보다 더욱 의미있는 노력이 될 것이다.

일하는 여성

◇ 문화체육부, 첫 여성국장 탄생

문화체육부는 1일 국장급인 국립중앙도서관 열람관리부장에 최영복씨(57)를 임명했다.

이화여대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최국장은 지난 63년부터 서울대 도서관을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분관장, 전산실장, 서지표준과장 등으로 31년간 근무하면서 전국도서관 전산망 구축 사업 등에 힘써왔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직 출신으로 첫 여성국장에 임명된 것은 1천5백여명의 전국사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에게 획기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김선옥 첫 국회 속기직 여성사무관

최근 실시된 속기사무관 시험에 합격, 한국의 첫번째 국회 속기직 여성사무관이 된 김선옥씨(41). 그는 70년 1년과정의 국회속기사 양성소를 수료하고 71년 9급의 속기사 공채시험에 합격 국회에 발을 들여놓은 후 꼭23년만에 사무관(5급)이 됐다

국회 속기사중 여성은 자신의 초임시절 10%였으나 요즘은 전체 82명중 59명에 이른다.

단체 소식

◇ 여성단체협-전국여성대회개최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연숙)는 14일 서울 이화여고내 유관순기념관에서 '공명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를 주제로 제 31회 전국여성대회를 개최했다.

제10회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인 소설가 박경리씨, 제30회 용신봉사상 수상자인 황온순 한국보육원장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 컴통신모임 '21세기프론티어' 창립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하는 30대의 젊은 전문가 2백10여명이 미래지향의 컴퓨터통신 모임 '21세기 프론티어'를 만들어 지난 29일 저녁 7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나우컴의 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선출된 회장 이양원 변호사는 "다가오는 21세기 새로운 문명, 새로운 세계질서와 우리 사회의 발전전략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박성현(고려시멘트 사장) 온현정(여성사 대표) 김성식(나라정책연구회 기획실장) 이재현(나우미디어 대표) 송광우(서울리서치연구소장) 유창선(민주당 이부영 의원 보좌관)씨 등 10여명이 운영위원으로 뽑혔다.

◇ "성희롱 문화를 걱정하는 모임" 발족

여성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학계 및 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가칭 "성희롱문화를 걱정하는 모임"이 10월 5일 발족됐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약칭 공대위) 주관으로 이날 오전 8시 서울YMCA에서 열린 모임에서 최영애 공대위 공동대표(한국 성폭력상담소소장)는 "국내 최초의 성희롱사건으로 알려진 서울대 조교사건은 직장에서 여성이 일할 권리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사건이 지닌 의미는 크다"며 "여성을 상대로 거리낌없이 벌어지는 성희롱을 사회에서 추방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모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이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미경 한국여성단체 연합공동대표, 이문우 한국여성의전화 회장, 정강자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정희 서울YWCA 대표 등 여성단체대표들과

심영희 한양대 사회학과교수,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과교수, 김혜숙 이화여대 철학과교수 등 학계인사,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박성자 한국여교역자회연합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성희롱사건의 원고 우 전서울대 조교와 박원순, 이종걸 변호사가 참석해 2심에 계류중인 사건의 개요와 경과보고를 했다.

◇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여성안수문제 총회 통과

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최대 교단인 통합측 올해 총회에서 "여성안수" 헌의안이 논란끝에 마침내 통과돼 여자 목사의 등장이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예장 헌법의 개정 및 각 노회의 인준등의 절차는 남아 있다. 각 노회의 인준이 날지 부결될지는 아직미지수지만 지난3년간 총회에 헌의조차 되지 못했던 이 문제가 올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여성안수를 가결한것만으로도 큰진전으로 여성신도들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

지난8일 서울 소망교회에서 개막,예정을 하루 앞당겨 13일 폐막된 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는 여성안수문제 가부를 묻는 대의원 투표에서 찬성 7백1, 반대 6백12표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예장통합 헌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이의 인준을 전국 51개 노회에 헌의해 전체 노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얻어야 정식으로 여성안수가 시행될수 있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여성안수문제가

이번 총회에서 통과는 됐으나 정식 실행여부는 일정상 빨라야 내년초에 최종 결정이 나게된다. 현재의 교단내 분위기는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태. 여성안수문제가 이번 총회에 정식 헌의되고 통과될 수 있었던것은 영등포노회, 평양노회, 평북노회등 18개 노회가 총회상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총회의 표결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최소 34개 노회의찬성을 이끌어내 성사를 결정지을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수년간의 논의로 여성안수를 위한 분위기가 어느정도 무르익었고 그러한 흐름이 이번 총회에서 반영된것이라고 볼때 각 노회의 인준을 얻을수 있을것이라는 전망은 가능하다.

노회의 인준을 받아도 예장 통합내에서 여성목회자나 장로의 등장은 빨라도95년말에나 가능하다. 통합에서는 신학대학 또는 4년제 일반대학을 졸업한뒤 3년제인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한해 목사안수를 주고 있다. 예장통합소속의 여신도로 목사나 장로 안수를 받기 위해 신학대학원을 마친 사람은 20여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중 목사안수를 원하는 사람중에서 예장내 첫여성목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 개신교 58개교단가운데 여성안수를 인정하는곳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구세군, 기독교 대한하나님의성회등 7개 교단뿐이며 아직 여성 임시직 전도사조차 실시하지 않는 교단이있을 만큼 보수적이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단체중 최대의 교세를 자랑하고 있는예장통합에서 여성안수가 실행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예상된다.

◇ 여약사회 - 약물남용 근절을 위한 세미나 개최

서울시 여약사회(회장 김기방)는 6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마약 본드등 환각물질 남용에 대해 약물남용 근절을 위한 대안을 찾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소년의 건강과 약물남용"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장복심여약사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광순애부위원장, 홍순용총무, 조순분위원, 송정숙간사등이 차례로 토론에 나섰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약국심부름을 시키지 말고 *약물중독의 첫걸음은 커피로 부터 출발하므로 커피를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담배, 술도 아울러 금지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회적 대안으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수있는 인쇄매체, 영상매체, 업소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제정 *공공장소와 스포츠시설, 청소년이용시설의 금연법 제정

*상설 유해환경단속반 설치 *청소년 유해환경실태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 *청소년 여가활동 프로그램개발 등 건전청소년문화 육성 등이 제시됐다.

또 여성, 민간단체와의 연대활동으로 *마약류단속법외에 환경물질 단속법 제정을 위해 시의회 등에 로비활동 *여성들의 마약류 자경대 조직 *경증중독자들을 위한 치료및 재활프로그램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낙태'를 주제로 한 춤 <마리아 콤플렉스>가 10월6-8일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무대에 오른다. 진지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할 성관계가 쾌락의 도구로 전락한 시대에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고뇌와 질곡을 그린 이 작품은 쾌락만능주의에 가속도가 붙어가는 우리 사회의 도덕불감증을 고발한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안무 박인숙씨)

새로나온 책

◇ 작가 유순하씨가 국내 여성운동의 대표적인 이론가와 단체, 작가를 구체적으로 거명해 신랄하게 비판한 <한 몽상가의 여자론/문예>을 펴냈다.

80년대말 노동해방문학을 비판했던 논리의 연장선 위에서 여성운동을 공박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 현대무용의 창시자이자 여성해방운동사에서 가장 자유로운 여성의 한사람으로 꼽히는 '댄발의 이시도라'가 1927년에 쓴 자서전(원제 <나의 생애>)이 나왔다.

이시도라 덩컨의 허심탄회한 예술론으로도 읽히는 이 자서전은 덩컨의 출생에서 시작해 유년기를 거쳐 유럽 편력 시대, 임신 시대와 그의 화려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1921년 7월13일 혁명 뒤의 러시아로 떠나는 데서 끝난다.

자유의지에 충실한 한 인간으로서 이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을 구현했던 덩컨의 삶과 예술을 이 자서전은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 민음사/7천원.

◇ "우리가 몰랐던 남성" 다프네 로즈 킹마 지음

산업사회의 진전과 함께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의 자기찾기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통 가부장 제도에 억눌려 발휘하지 못했던 여성들의 능력을 일깨우고 지위향상을 모색하는 운동은 이제 새삼스런 일이 결코 아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여성이 처한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남성을 여성과 대결, 투쟁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책은 이런 의미에서 기존 여성운동들과 궤를 달리한다. 남성에 대한 분노를 터뜨릴 게 아니라 남성들에 숨겨진 여러 고민들을 여성들이 우선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더 원숙한 인간관계를 맺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요즘처럼 남녀 관계가 더 악화된 적이 없다는 게 기본입장. 과거에 남성들이 비이성적이었다면 오늘날은 정반대로 여성들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 남성들이 겪는 고통에 여성들이 전혀 눈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는 20여년이상 심리치료사로 활동하며 남성의 내면세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전문가. 수많은 남성들과의 대화와 임상경력을 토대로 남자들이 특유의 자존심 때문에 여성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부분을 깊숙하게 다루고 있다. 최근 남성들에 의한 남성 연구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관점에서 남성을 직시하고 있다는 데서 1차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